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

김경웅 / 통일원, 정치학 박사

남북의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형태로든 서로 변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절대적인 배제단계에서 상대적인 배제단계로 진척을 보고, 다시 서로 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분단 세월 45년이 빚어낸 각종 폐해는 하루 아침에 씻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통합 후유증 역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도 일깨워주고 있다.

동서독 사례의 교훈 : '마음의 고향'을 찾는 문화정책

동서독 경우에도 1960년대 중반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는 등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문화교류를 일시 제한하거나 차단한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서독정부의 꾸준하고 주도면밀한 양면 교류정책, 즉 비정부 및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방향을 실천함으로써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동독정권을 교류의 장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얻은 성과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민족

문화의 유산이 변조되는 걸목을 최대한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 동서독에서 모두 독일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의식의 공감대가 굳건히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서독의 동방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그 핵심은 '상호접근을 통한 변화' 추구와 더불어 '작은 걸음의 정책'을 펴나간 것이다. 이 양방향으로서 상대방의 저항과 반발을 극소화시킨 것은 현실적인 정책접근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동서독 문화교류는 주로 문화예술인의 교환 방문과 공연이 주종을 이루면서 학술 교류·청소년 교류도 점차 확대됐다. 특이한 사실은 1982년 청소년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수학 여행의 형식을 빌려 양측 청소년이 교환 방문한 점이다. 이는 동서독 청소년들이 독일민족의 공동체의식을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동독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주의 조국'보다는 '독일민족의 마음의 고향'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86년 5월 6일 양독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은 정부·민간부분을 가리지 않고 문화교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민족은 실질적인 사회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고, 민족분화의 이질화라는 우려를 씻어냄으로써 내면적 통일을 이루는 바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교류는 통독 뒤에도 새로운 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통합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문화통합 노력은 기존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이외에도, '문화기금'을 설치하여 동독지역의 문화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언론기관 재편, 박물관과 도서관, 문서보관소의 프로이센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조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재단 설립 등 상당히 다양한 정성을 쏟고 있다.

동서독의 문화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당국간의 문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민간부분의 문화교류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상대측이 회피하는 분야까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활력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둘째, 상대측이 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거나 명분에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민감한 분야는 교류협력을 뒤로 미루었다는 점이다. 즉 쌍방이 공감하는 분야(음악·미술·전통문화·어학)와 상대측이 호응함으로써 당장 이득이 되는 분야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문화교

류에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셋째, 서독 정부는 공개적인 제안이나 교류 원칙을 발표하는 경우 선전효과 보다는 장기계획의 차원에서 개인·단체·정부의 모든 가용 재원을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가동하는 '전방위 교류'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종이에 물 스며들기식의 접근'을 함으로써 상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통일 과정에서 이미 장악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일종의 데이터뱅크식의 종합적·체계적인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 교류에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시절에 접촉했던 장본인들이 결국 각계의 요소요소에 진출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 발전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들을 꾸준히 지원·양성하여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과도기에 나타난 의외성 있는 문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기관 내의 전문가 그룹(총론적 뿐만 아닌 각론적 전문가)과 대학·연구소의 전문가 그룹, 각 정당 및 재단(아테나위재단·한스자이델재단·휴볼트재단 등)에 속한 전문가 그룹들로서 저변이 다양하고 폭넓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사회는 조기 통일로 인한 과도기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5년간 공산독재체제의 상흔으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무력



감과 불안감, 그리고 황폐화된 의식구조와 정치이념으로 오염된 문화형태들은 실질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다. 따라서 의식통합을 통해 '정신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최대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진 독일 민족의 국가적 통합은 양 당사자간 민족 재통합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동서독은 비록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류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의미의 세계에서 존재해 온 두개 독일은 생활 양식의 차이, 문화적 이해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깨끗이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동서독 지역의 경제 사회적 차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문화를 통합적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문화적 통합은 두가지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는 동독인의 생활세계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는 전체로서의 독일을 조감할 지도가 새롭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은 통일과 함께 사회주의 사회였던 동독을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로 수용하여 함께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독의 변화는 동구권내 구조의 '창조적 파괴'로서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함께 성장할 문화'라는 인식이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 인식은 다른 문화를 비판적으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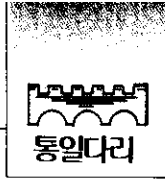
용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자의식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서독이 각기 잘 성장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한 뿌리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라날 수 있다는 일상적 문화 인식은 문화정책의 전향적 성공을 이미 기약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 그 프로그램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동서독 통합사례와 또 다른 차원에서 착실한 문화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정치적 통합에 앞서 문화적인 동질성을 착실히 회복함으로써 동포애적인 통합을 기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특히 강조할 만하다

양쪽의 차이점은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여 이념적 공해부터 씻어가는 자세가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이라는 거울로 비추는 자기 투영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록 땅은 갈라져 있다고 할지라도 민족은 인위적으로 나뉘질 수 없다는 견지에서, 또한 문화란 민족 공유의 자산이며 어느 한쪽만이 배타적인 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잘못된 민족현실은 비판되고 바로 잡혀져야 할 것이다. 균형 잡힌 비판정신이야말로 민족분열을 막고 분단의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올바른 방책이다. 이로써 통일문화의 별이 스며들고 민족 재생 의지를 되살려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는 일은 남쪽에서 더 분별있게 외래문화를 여과하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자기성찰 만큼이나 바람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북의 문화가 도식적인 고정관념과 환상적인 교조주의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롭게 자리잡을 민족문화의 위상은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본틀로 하고, 통일문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문화적 제창조를 피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래야만 민족문화가 변성기를 지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원칙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은 이미 상당한 연구의 진척을 보고 있다. 지난 1990년 2월 11일 발표된 남북 문화교류 5개 원칙은 북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 짜여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분단 이전 우리 민족 전통문화의 우선 교류, ②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③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한 표현방식 지양, ④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 ⑤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이다. 또한 남북의 문화예술계 인사 1백명씩으로 구성되는 민족문화공동위원회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비한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국내외 유적 공동 발굴, 분야별 교환방문과 공연 및 회담 추진, 종교 교류 확대 등 많은 대안들이 준비된 바 있다.

이밖에 새로 지적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동서독 사례와 남북한 상황의 차이를 감안하여 문화교류정책의 세부지침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리라는 점이다.

예컨대 실질적인 정부 지원 아래 개인간·단

체간·해외동포간 또는 제3국 참여 하의 우회 접촉·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그 일책이다. 그리고 남북 문화협정과 주요조항에 따른 추가의정서를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다는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문화분야 활용방안도 적극 생각해봄직한 사안들이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사항으로 꼽히는 북한문화에 대한 심층연구와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출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주체사상 중심의 이념문화에 대한 문화적 진이양상을 유형별로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 사이에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입력될 수 있다. 데이터뱅크식의 종합적·체계적인 장치를 설치해 계속 보완해 가면서 양쪽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남북한의 문화 현실을 분석, 평가한 토대 위에서 110개에 달하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연구는 방대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10개 분야로 나누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해 본다.

- (1) 생활문화 : 김치 전시회와 김치 담그기 솜씨 자랑대회를 비롯한 전통음식 분야, 지역특산물 전시, 한복 전시 및 변천사 공동연구 등 11개 분야
- (2) 언어 : 언어 공동 연구, 통일국어대사전 공동 편찬, 한글 기계화 공동사업 등 7개 분야

- (3) 문화재와 전통 문화예술 : 문화재 상호 교류 전시회 및 모형교류, 문화 관광지도 공동 개발, 민족사 박물관 공동 건립, 천연기념물·명승 공동조사 및 지정, 비무장지대 유적 답사·발굴, 전통 민속놀이 공동조사, 지역문화축제 초청 등 22개 분야
- (4) 문학 : 고전 공동연구·심포지움 개최, 문학관련 국내외 행사 초청·참여 등 7개 분야
- (5) 미술 : 백두·한라 스케치 및 사진촬영대회, 역사 인물 동상 공동 제작, 서예 전시회, 통일기원 도자기 제작대회 등 16개 분야
- (6) 공연예술 : 각종 합동 공연·제작 교류, 공연예술 영상자료 교환 등 12개 분야
- (7) 영화 : 역사 인물·자연 소재 영화 공동 제작,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야외 촬영장 공동 건립, 영화제 및 관련 행사 공동 참가 등 11개 분야
- (8) 도서출판 : 정기 간행물 교환, 속담집·민화·설화집 공동 발간, 저작권 보호 등 9개 분야
- (9)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 : 전래 동화 소재로 만화영화 공동 제작, 아동미술 교환 전람회, 인형극 축제 등 7개 분야
- (10) 기타 : DMZ 자연공원화, 관광자원 개발, 인삼축제, 종교행사, 통일카렌다(명승고적, 문화재, 역사인물, 주요 건축물 등 수록) 제작 보급 등 9개 분야

위에서 열거한 문화 프로그램들은 남북 교류 5개 원칙에도 적절히 부합되며 현실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들이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정책적 선택, 대내외적인 여건과 연계되어 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현 남북한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고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황의 탈정치화를 기도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문제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융화만으로 모든 과제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어야 공동체 의식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심리적 갈등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뿐 아니라 민족 발전 역시 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은 여타의 제도적인 통합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완결될 때까지는 통일과정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통일은 당위성만을 주장해서 이룰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논의에 치중해서는 진전을 보기 어렵고, 그 통합의 기초가 튼튼할 리 없다.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통합 기반을 확실히,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한다. 남북의 현실이 넘기 힘든 장벽이라면, 그 현실을 바꾸어 가도록 노력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남북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여기기 보다는, 희망의 문세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畝**